

# ‘의료헬스케어뷰티’ 초광역 협력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4일 서울 코엑스(COEX) '2024 헬케어·재활·복지 전시회 바이오헬스케어 특별전시관'에서 '호남권 의료헬스케어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비전자의료기기, 전남-소재, 전북-전자의료기기 상호 지원  
호남권 지자체, 지방시대 과제 선정...글로벌 시장 진출 등 목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모처럼 뭉쳐 의료헬스케어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에 나서기로 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4일 서울 코엑스(COEX) '2024 헬케어·재활·복지 전시회 바이오헬스케어 특별전시관'에서 '호남권 의료헬스케어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해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내 광주-전남-전북 초광역권 과제로 포함된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뷰티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이날 국비 확보 및 기업 유치를 통한 호남권 의료헬스케어뷰티산업 발전 의지를 다졌다.  
선포식에는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를 비롯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주관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병원, 전남바이오진흥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대학교매카노바이오기술융합연구소, 한국바이오화센터협의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의료헬스케어뷰티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호남지역 내 기능적·공간적 초광역

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단일지역 보유 기반시설(인프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의료헬스케어뷰티제품의 전주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시장 진출 거점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광주는 비전자의료기기 및 제품 상용화를, 전남은 소재 분야를, 전북은 전자의료기기 분야를 맡아 상호 연계하고 지원하게 된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호남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돼 노화질환, 특히 의료헬스케어뷰티 관련 제품 배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획 중인 초광역사업이 2025년 신규 국비 사업에 반영돼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가권력 분산해 지방분권 시스템 전환을”

전남연구원 이슈 리포트 발간

전남도가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특별자치도를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의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분권에 걸맞은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4일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슈리포트 발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 연방제 분석을 통해 심화되는 인구소멸 위기 등 극복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모두 51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주(州) 정부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 주권 부여 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했다는 것이다. 중앙은 정책·제도·지침 등을 제시하고 지방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행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광역단위의 자치공동체에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재정 정책 결정에 광역자치체의 대표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열린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입장을 밝히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특별법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특별자치도는 전남만 잘 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관란을 제대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현철 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전남도는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전남 농특산물 동남아 수출길 확대

태국 식품 박람회 참가... 79건 상담·7000 달러 협약

전남도가 지역 농식품 업체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태국농특산물, (주)에스에스 코리아, (주)아리움, 대륙식품(주)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 3대 식품 박람회인 '타이팩스 박람회'에 참가했다.  
타이팩스 식품 박람회(THAIFEX-ANUGA ASIA)는 지난 1일까지 5일간 40여 개국 3000여 개 사가 참여했다. 동남아 국가에서 개최하는 최대 규모 전문 기업 간 거래(B2B)중심의 국제식품 박람회다. 5월 30일까지 3일간은 전문 바이어를

위한 무역상담 박람회, 이어 1일까지 이틀간은 일반인이 방문하는 소비자 박람회로 개최됐다.  
전남도는 지역 4개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입차료, 기본장차비, 운송 및 통관비, 통역비 등을 전액 지원했다.  
참가 기업은 총 79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총 302만6000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녹차, 그린티 믹스를 수출하는 한국제다농조합법인은 7000달러의 업무협약(MOU)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외국인주민과 행복 동행

18일까지 도정 모니터링단 30명 모집... 법률 개선·정책 제안 등

전남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5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전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불합리한 법률 개선 제안, 외국인주민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참여 창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5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참여 인원은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다. 또 평일 운영과 거리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말 운영과 찾아가는 권역별

간담회도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주민은 오는 18일까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니터링단 선발은 서류 자격, 국가, 한국어 구사 정도 등을 종합 심사해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5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으로 선발되면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전남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활동을 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평동산단에 국내 첫 전기차 배터리 접합 실증센터

금용 트라이아웃센터 활용 2028년까지 186억 투입

전기자동차 주요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배터리 접합부 결함 여부를 검증하고 안전성을 실증하는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광주에 구축된다.  
광주시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EV 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주목되는 접합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제조 부품에서 완성품까지 실증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의 사업이다.

2028년까지 국비 102억원 등 186억원을 투입해 실증센터,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접합부 실증, 시제작 지원, 용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핵심인 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센터는 광주 광산구 평동 1차 산단에 있는 금용 트라이아웃센터를 활용해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원인 중 하나로 전기차배터리 접합 결함이 꼽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합 관련 국내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제조기업마다 제각각 자체기준에 따라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게 현

실이다.  
특히 국내에는 현재까지 접합부 안전성을 실증하는 기반 시설도 없다.  
광주시는 접합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면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배터리는 전기차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광주 미래 차 전환에도 필수적인 사업 분야"라면서 "자동차 산업과 용접 등 뿌리 산업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실현에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